2001정책연구보고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의 서술과 그 문제점

국회의원 연구단체
갑오동학농민혁명연구회

기-10

국회의원연구단체

갑오동학농민혁명연구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26호

☎ (02)788-2743 / (02)784-6382

2001정책연구보고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의 서술과 그 문제점

2001. 12

국회의원 연구단체
갑오동학농민혁명연구회

회　　장 : 김 태 식
연구책임자 : 윤 철 상
연구책임자 : 권 오 을

- 목 차 -

1. 머리말 5

2. 국정교과서 체제의 문제점 7

3. 한국 근·현대사와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동향 10

4.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용어의 변천과 서술상의 문제점 1 16
   : 검인정 국사교과서 시기

   1) 1949년판 우리나라 역사 16

   2) 1956년판 고등학교 국사 18

   3) 1965년판 중학교 중등국사 20

   4) 1970년판 고등학교 중등국사 21

5.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용어의 변천과 서술상의 문제점 2 24
   : 국정 국사교과서 시기

   1) 1975년판 중학교 국사 24

   2) 1979년판 중·고등학교 국사 26

   3) 1982년판 중·고등학교 국사 28

   4) 1990년판 중·고등학교 국사 32

   5) 1996년판 고등학교 국사 34

6. 북한 역사교과서 검토 40

7. 맺는말 44

1. 머리말

최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몰고 온 파장을 보면 이제 국사교과서는 내국민의 관심사에 그치지 않고 주변 나라와의 심각한 외교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다시 한번 더 확인되었다. 과거나 현재나 한 나라의 역사는 주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온 만큼 국사교과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서술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서술이 아닌 왜곡되고 편향적인 국사교과서 또는 역사서술은 국내외적으로 더 이상 존립하기 힘들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더구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는 국사는 평생 떨쳐지지 않는 한국사에 대한 기본 인식이 되기 때문에, 또 국정체제에서 발행되는 교과서는 단일종이기 때문에 국사교과서가 어떻게 서술되는가 하는 문제는 곧 국가의 미래가 걸린 막중 대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불거지고, 2002학년도부터 새로운 개정판 국사교과서가 간행되는 문제까지 함께 겹쳐 국민들의 국사교과서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역사교육에 관한 제 7차 교육과정[1]을 보면 개항 이후 한국 근·현대사는 심화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가르칠 수도 있고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려있다. 물론 심화선택과목이라고 하여 더욱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취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학교가 선택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므로 한국 근·현대사를 전혀 모르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는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여 한국을 어떠한 국가와 사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는 시대사이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우리가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도 사실 근·현대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근·현대사는 개항 이후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동학농민혁

1)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해방 후 교육과정의 변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기(1945~1946), 교수요목기(1946~1954), 제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제 2차 교육과정기(1963~1974), 제 3차 교육과정기(1974~1981), 제 4차 교육과정기(1982~1988), 제 5차 교육과정기(1988~1992), 제 6차 교육과정기(1992~1997), 제 7차 교육과정기(1997~ 현재).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교육부, 2000), 91~97면 참고.

명[2], 갑오개혁, 의병전쟁, 3·1운동, 항일 무장투쟁, 한국전쟁, 그리고 4·19혁명 등 민족·민주운동이 태동하고 성장·발전하는 시기이다. 특히 갑오동학농민혁명을 거치면서 민중의식이 급신장하여 사실상 근대 사회로의 문을 열었고, 이러한 역사의 변화와 진보야말로 일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설한 원동력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한국 근·현대사가 외면될 기로에 처해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기라 생각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어떠한 역사용어로 표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역사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검토는 앞으로 국사교과서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서술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여 한국 근·현대사에서 정당한 역사적 위상을 확보하고 그 실천적 방안과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도도 함께 갖는다. 이는 현재 항일독립운동의 기점(起點)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지연되고 있는 갑오동학농민혁명과 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서훈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기초연구 및 정책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정교과서 체제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사학계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적 사상(史像)과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치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각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개정된 지난 날 국사교과서에 대한 순차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끝으로 북한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교과서에 대한 검토는 남북통일의 민족적 과제에 부응하여 북한의 역사교육은 물론이고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남북통합 교과서 제작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2) 현재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 등으로 대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본 연구회의 명칭에 따라 갑오동학농민혁명으로 통일한다.

2. 국정교과서 체제의 문제점

우리의 국사교과서는 1974년 국정체제가 된 이후 단일종의 교과서만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정체제의 국사교과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달해야 할 핵심적인 역사지식과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국민교육에 절대적 권위를 갖는 역사서술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사교과서는 국가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 서술되고 제작된다. 그러므로 국사교과서에 채택된 역사용어나 내용은 비록 학문적 성과를 바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의도에 따라 조정될 수밖에 없다. 지난 날 일제 식민지 시대 '교육칙어'에 따라 식민통치용으로서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을 전후로 하여 검인정에서 국정체제로 국사교과서의 서술과 발행체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 또한 당시의 정치적 변동과 새로운 국가적 목표 및 이념의 설정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신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국난극복과 주체적 민족사관에 투철한" 역사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목표가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검인정체제를 폐지하고 국정교과서에 의한 한국사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국정교과서 체제는 한 연구자의 지적과 같이 "유신독재를 합리화하는 유신이데올로기의 보급·재생산도구로 삼으려는"[3] 의도에 따라 강행되었다. 이러한 목적과 동기[4]를 갖는 국정교과서의 역사서술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서술이 될 수 없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1974년부터 정권측의 의도 아래 강행된 국정체제는 이미 유신정권의 퇴진과 함께 검인정 체제로 개혁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사교과서는 국정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 편수관을 역임했던 실무자의 글을 통해 그 실상을 살필 수 있다.

"과거의 역사교과서는 …하나의 성전(bible)이요 역사교육의 절대적 권위로 교사는 교과서

---

3) 남지대, "고교 국사교과서의 근현대편의 서술과 문제점",<<역사비평>>(역사비평사, 1988여름), 289면

4) 고등학교 <<국사>>에 대한 <<교사용지도서>>에서도 국정화의 목적과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체제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위해 국적 있는 교육을 강화하면서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주체적 민족사관을 수립하고 교육함으로써 민족적 유대의식과 대동 단결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애국심을 기르자는 것으로, 그 동기는 결국 민족이란 이름으로 현실을 은폐하고 유신 체제를 정당화시키고자 한 것이다."<<고등학교 국사 교사용지도서>>(국사편찬위원회, 1999), 3면

의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해설하고 주입하여야 했다. …그러나 현대사조에서는 교과서를 성전시하는 데서 점차 탈피하여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학습도구의 성격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하는 것 이외에도 학습자 자신의 학습활동을 조장해 줄 수 있도록 문제의 시사, 문제의 탐구를 위한 안내, 자료 등으로 조직, 서술되었다. 또한 역사교과서는 역사교육을 위한 유일한 교재가 아니며 다만 학습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교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교과서관은 점차 현대적 교과서관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전통적인 교과서관과 현대적 교과서관의 절충형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체로 동양권이 이러한 유형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절충형 교과서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교과서는 많은 역사적 사실의 제공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내용을 정선 수록, 학습자가 역사의 줄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전통적인 교과서관의 장점과 학습자 자신이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응용력을 확대·해결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학습방법을 제시하는 현대적 교과서관의 장점을 취합하여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의 역사교과서는 그 나라의 교육환경, 여건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구권의 역사) 교과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학교수업에서 전부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 자신의 읽기자료 또는 '읽을 거리 책(reading book)'의 성격을 띠고 있어 우리 교과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5]

이 실무자는 전통적 교과서와 현대적 교과서와의 차이점, 그리고 동양권과 서양권 교과서의 차이점을 길게 밝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전통적 교과서 체제에서 현대적 교과서체제로 이행하는 절충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의 장점을 강조하고 서양권의 현대적 교과서체제가 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절충형 역사교과서가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과 여건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형태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 같으나, 다시 한번 더 뜯어보면 우리나라의 여건이 아직 서양과 같은 민주화 수준도 사회발전도 이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국정체제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대해 비판할 게 아니라 장점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지극히 보수적인 체제내적 논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신정권은 퇴진했으나 정치와 사회의 일반적 수준이 그렇지 못하고, 더구나 남북분단의 긴장상태가 지속되니 당분간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이를테면 '개발독재' 논리와 유사한 논리로서 국정교과서 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

5) 윤종영, <<국사교과서파동>>(혜안, 1999), 145~147면.

이러한 보수적 체제논리를 대변하는 실무자의 관점이 존재하고, 여전히 국사교과서의 국정체제가 유지되는 한 국사 서술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체제내부에서 일어나기란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사교과서는 발행체제상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가치관과 논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서술이 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위의 실무자의 글이 발표된 이후 수 차례의 국사개정 작업[6]을 통하여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국사서술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학계의 일각에서 "단일 국정교과서 발행체제라는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교과서에 담길 내용 준거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국사교과서가 역사에 대한 국민의 폭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획일적인 단일교과서체제이기 때문이다. 현대는 다양성의 시대이고, 역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시급히 검인정으로 환원해야 한다."[7]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최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이후 이러한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차기(2002년 이후) 국사교과서부터 전면적으로 국정이 검인정으로 바뀔 것이라는 발표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8]. 이는 곧 국정체제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서술을 계속 유보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동안 우리 사회가 달성한 민주화 수준과 사회발전을 여전히 고려하지 않는 시대 착오적인 역사교육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6)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는 해방 이후 검인정 체제가 1974년 국정체제로 바뀐 이래 고등학교 교과서는 1979년, 1982년, 1990년, 1996년에 개정판이 각각 나왔다.

7) 윤종영, 위의 책, 287~288면에서 인용한 강만길 교수의 주장이다.

8)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 개항 이후 한국 근·현대사 부분이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되고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바뀐다. 이는 국정의 큰 틀은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검인정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때에도 교육부의 지침방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극히 작은 변화에 지나지 않을 전망이다.

3. 한국 근·현대사와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동향

이런 국정체제 아래 우리의 역사교육과 역사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학계와 교육현장에서는 80년대부터 문제제기와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특히 한국 근·현대사의 성격과 근대사회를 이끈 주체세력과 운동에 대한 해명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곧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심화를 의미했고, 이에 따라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어느 주제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 1994년이 갑오동학농민혁명의 100주년이 됨에 따라 호남지방을 비롯한 전국에서 기념행사 및 연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문적 성과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인의 관심과 열의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마침내 국사교과서(고등학교 96년판)에서도 이러한 성과와 관심을 외면할 수 없어 농민의 각성이라는 이름 아래 "근대사회를 이끈 주체는 시민계급이었다. 전 근대 사회에서 그들은 피지배층으로 존재하였다. 한국사회에서도 조선 후기에 이르러 피지배층이 사회변화를 선도하였다. 당시 피지배층의 대다수는 농민들이었다. …정부에 대하여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된 피지배층은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배층의 억압과 횡포로 인하여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촌에서 이탈해갔다. 그들은 임노농자, 유랑민 등이 되기도 하였다. 일부 농민들은 마침내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민란으로 불리는 농민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들은 기존의 사회질서와 가치관을 거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농민들에 의한 새로운 질서의 모색은 궁극적으로 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었다."[9]고 하여 농민의 각성과 농민봉기를 중심으로 근대 사회를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학계에서나 일반적인 수준에서나 한국 근·현대사를 지배층 중심으로 보는 경향은 사라졌다. 그리고 갑오동학농민혁명을 지배층의 통치체제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도들의 불순한 소요라는 식의 명칭인 '동학란'으로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좀더 문제의식을 갖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허다하다. 특히 법률적으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여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독립운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10] 국사교과서에서도 갑오동

9) <<국사>>하(1996년판, 1998년 인쇄), 6면.

9) 이 점에 관해서는 본 연구회 '2000년 정책보고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적·법률적 검토>>를 참조할 것.

학농민혁명에 대하여 학계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수용·반영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양보를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국정체제가 안고 있는 서술체계의 폐쇄성과 발행체계의 독점성에서 비롯하는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갑오동학농민혁명 당시 직면했던 한국사회의 역사적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식민지 지배로 넘어갔고,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그러한 역사적 과제가 여전히 우리사회의 중심과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실패는 자주적인 근대 사회로의 좌절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역사적 진통들-남북분단, 시민사회정착, 민주화, 노사갈등 등-에 대한 역사적 뿌리로 작용하고 있다.[11] 이러한 문제점이 눈에 드러남에도 국사교과서는 학계의 최근 연구성과를 수용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정리하는데 주저하였고, 또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의의를 규명하는데 지배층 중심의 체제적인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근대 이후의 전체상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한국근대사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입장과 서술방식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관점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청·일본·러시아의 대립이 이중으로 뒤섞여 자주적 근대화를 가로막는 등 다른 식민지 종속국가들보다 열악한 국제환경에 놓여있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뒤늦게 자본주의화의 길로 들어선 일본에 의하여 세계사에 유례없는 폭압적 지배와 수탈을 당하였다. 그 결과 자주적 근대화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과 자본주의 열강, 특히 일본 사이의 대립은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의 근대는 반제(반침략)반봉건 민족해방운동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2]라고 하여 한국근대사는 밖으로는 침략하는 외세에 저항하고 안으로는 낡고 부패한 봉건사회를 개혁하는 이른바 반봉건·반외세의 역사적 과제[13]를 수행하는 사

---

11) 한국역사연구회는 "1894년 농민전쟁에서 민중이 패배함에 따라 자주적 근대화를 수행할 변혁역량은 대거 파괴되었고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은 강화되었다. 서양의 각종 제도가 도입되어 외형상으로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듯하였으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종속은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역사, 229~230쪽)고 하여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말미암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종속화, 식민지화, 불완전한 해방 등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

12)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역사비평사, 1992), 229면

13) 여기에 대해 김영작은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후반이라는 역사적 단계에서 조선의 내셔널리즘도 이와 같은 이중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었다. 곧 그 하나는 당시 조선이 처해있던 국제환경 속에서 자본주의 열강으로부터 가해오는 외압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외적 과제와, 다른 하나는 대외적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대내적으로는 봉건적 중앙집권제에 따르게 마련인 이른바

회변혁운동[14]과 민족투쟁운동[15]을 양 축으로 삼아 성립·전개되었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 근대사의 규정은 곧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농민의 각성과 농민봉기'를 중심으로 한국근대사회를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19세기 농민봉기의 정점이자 결정판으로 일어난 갑오동학농민혁명이 낡은 봉건체제를 거부하고 한국근대사회를 추진하는 원동력이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기점[16]으로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한국근대사회와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변화와 민주화 수준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지만 이미 학계에서 인정되는 성과가 교과서로 수용·반영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혁명성과 근대사회에의 지향성은 학계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관점을 갖는 쪽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인정하고 있었다. 진단학회가 1963년에 발간한 <<한국사>> '갑오동학란' 항목의 그 첫머리에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이렇게 밝혀 놓고 있다.

"고종도 31년(갑오)에 이르러 이 나라에서는 기어이 혁명적인 대반란이 터지고 말았다. 세기를 통하여 양반지배계급의 폭정 아래 억압당하고 착취당해온 농민대중이 '인내천'의 자유·평등 사상을 외치고 용감하게 일어선 근대민족종교의 동학교문과 연결 협동하게 되므로, 과거와 같은 한 지방 탐관오리 상대의 민요·민란형태가 아니라, '보국안민'이라는 큰 기치 아래 사회제도와 00국가정치의 대개혁을 기도하여 대담한 농민전쟁의 형태로 오백년 왕조와 그들의 척족정권을 뿌리채 잡아흔들었다. 나아가 그들은 대외(對外)하여 척왜·척양을 주장함으로, 근대 '내셔널리즘'의 기치도

'사이비 통합성'을 지양하고 참된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여야 할 대내적 과제였다." 김영작, <<韓末ナショナリズムの 研究>>(일본동경대출판회, 1975), 2면.

14) "한국근대사의 내용의 기본적 측면은 한국 주민이 스스로의 해방을 위하여 전개한 주체적 변혁의 움직임이다." 박현채, 정창렬 편, <<한국민족주의론Ⅲ>>(창작과 비평사, 1985), 9면

15) "조선 후기 이래의 반봉건항쟁은 봉건체제와 외국자본주의의 침략에 저항하는 1894년 농민전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1894년 농민전쟁을 계기로 근대사의 중심과제는 반봉건투쟁에서 반침략(반제)투쟁으로 이행하였다."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229면.

16) 이 점에 관해서는 본 연구회 '2000년 정책보고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적·법률적 검토>> 21~26면을 참조할 것.

뚜렷이 내세우게 되었으니, 이를 가리켜 갑오동학란이라 하며, 이 동학란을 계기하여 친청사대의 비겁한 척족세도가 '차병대초(借兵代剿)'라는 명목 아래 청병을 도입함으로, 10년 이래 양육하고 대기해온 신흥제국주의 일제에게 전쟁도발의 호구실을 던져주어, 청·일전쟁이라는 국제전쟁까지 야기하게 되고 말았다. 따라서 갑오동학란은 실로 근세왕조 건국 이래의 최대사건으로, 대내(對內)해서는 전연 타율적인 근대화의 미완성 과정 속에 왕조 자체의 붕괴를 촉진하고, 대외해서는 동양국제사회의 중대변국을 초래하여 그 역사적 의의가 비상한 바 있으니 이를 분석 천명함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닐 듯 싶다."17)

이러한 <<한국사>>에서도 갑오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민요가 아닌 조선조의 최대사건으로서 사회제도와 국가정치의 대개혁을 기도한 혁명적 대반란이었다고 보았다. 이는 1960년대 초부터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의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그 용어는 '동학란', 즉 왕조질서를 어지럽히는 난리 정도로 평가절하 되고 있다. 그 혁명성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난리였다는 관점은 그 당시 학계 일각의 보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갑오동학농민혁명이 단순한 민요나 난리가 아닌 외압으로 인한 변혁이 강제된 조건에서 근대사회의 방향과 직결된 변혁운동이었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는 농민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일어난 변화였다.

농업사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김용섭교수는 아래와 같이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발원인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1894년의 농민항쟁은 1862년 이래의 농민항쟁의 연장선상에서, 거기에 열강에 대한 개항통상과 일제침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인이 하나 더 추가되는 가운데 발생한 농민운동이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열강에 대해서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민족운동으로서 전개되고, 특히 일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의미에서 뿐 만 아니라, 그 정치적·군사적 침략(왕궁침범·정권교체·갑오개혁)에 대해서도 대항하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반침략 민족운동으로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농민운동의 원인도, 농업문제의 측면에만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조선왕조의 봉건적인 부세제도와 개항

17) 진단학회, <<한국사>> 현대편(을유문화사,1963), 2면.

후의 미곡무역 및 그 결과로서 재래되는 농민몰락, 토지를 위요(圍繞)한 모순의 가중이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부세제도의 불합리한 운영과 자의적 수탈은 그 직접적 계기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불합리한 부세제도가 농민몰락을 재래하고, 또 개항통상 후 지주적 상품생산과 농민적 상품생산이 대립하는 가운데 후자가 전자에 밀려 몰락함으로써 토지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이 한층 더 촉진되고 있었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었다. …1894년의 농민운동과 1862년의 농민운동은 그 반봉건운동으로 내세우는 성격에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그 운동에서 내세우는 목표와 구호, 운동주체의 혁명성, 조직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1894년의 농민운동은 한 마디로 계획되고 준비된 반봉건 혁명운동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반침략 민족운동이었다."[18]

김용섭교수는 19세기 농민항쟁은 어디까지나 조선봉건체제의 부당한 부세제도와 토지문제가 겹쳐 일어난 것으로, 특히 개항 이후 외세와 결탁한 지주적 상품생산이 농민생활을 파탄으로 몬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19세기 농민항쟁의 결정판[19]으로서 일어난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것이 아닌, 농민적 자각이 바탕이 되어 개항 이후 어떠한 사회·경제 질서를 구축하느냐를 놓고 일제와 싸운 반봉건 혁명운동이면서 반침략 민족운동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반봉건 혁명운동과 반침략 민족운동으로서 전개된 갑오동학농민혁명은 필연적으로 근대 사회를 여는 결정적 조건[20]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또 일제의 계속적

---

18) 김용섭,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일조각, 1992), 365~366면.

19) "조선왕조 최말기에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농업문제와 관련하여 농민운동, 농민항쟁이 무수히 전개되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크게 두 사건으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하나는 개항 전의 1862년에 일어난 삼남지방의 농민항쟁이고(임술민란), 다른 하나는 개항 후의 1894년에 일어난 농민전쟁(동학란)이었다. 이 두 운동은 이 시기 농민운동의 두 분수령을 이루는 것으로, 이 시기에 발생하여 전개되는 일련의 봉건 말기적인 농민운동 과정에서 그 시작 형태이자 종결 형태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두 운동은 하나의 운동사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그 각 운동의 원인, 구호(강령), 운동을 추진하는 주체·조직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서는, 그 농민운동으로서의 질적 발전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김용섭, 위의 책, 360~361면.

20) "이를(갑오동학농민혁명-인용자) 계기로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의식이 고양되었고 향촌사회가 철저하게 분화됨에 따라 근대사회를 여는 결정적 조건을 만들어냈다." 이이화,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몇 단계",<<조선후기의 정치사상과 사회변동>>(한길사, 1994), 218면.

인 침략에 대항하여 일어난 항일의병전쟁과 무장독립투쟁의 근본적인 힘으로 계승[21] 될 수밖에 없었다.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러한 연구동향과 성격규정은 마침내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적 성격과 반침략적 성격 때문에, 당시의 집권세력과 일본 침략 세력의 탄압을 동시에 받아 실패하고 말았으나, 그 영향은 매우 컸다. 반봉건적 성격은 갑오개혁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쳐 전통질서의 붕괴를 촉진하였으며, 반침략적 성격은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이 의병운동에 가담함으로써 구국 무장투쟁을 활성화시켰다."[22]고 하여 국사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던 것이다.

21) "동학농민혁명운동은 그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반일역량을 크게 제고시켰으며, 반일의병운동의 저변의 토대를 튼튼히 만들었다. 동학농민혁명운동에 참가했던 다수의 동학농민군 병사들이 그후 의병부대들의 병사가 되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일무장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였다."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일조각, 1993), 391~393면; "농민군의 반봉건·반침략 지향은 다시 대한제국기의 민중운동, 1905년 이후의 의병전쟁으로 계승되었다."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255면.

22) 고등학교용 <<국사>>하(1996년판, 1998년 인쇄), 86~87면.

4.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용어의 변천과 서술상의 문제점 1 : (검인정 국사교과서 시기)

역사서술에서 어떠한 용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자의 관점과 주장에 좌우된다. 이런 점에서 역사용어란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것의 전개와 지향, 그리고 그 사건의 전체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볼 때 그러한 것들을 집약하고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역사용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용어는 그 역사적 사건의 전체상을 담고 있는, 역사서술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성격규정이 어떠하였는지, 그에 따라 우리 사회가 갑오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검토하고자 할 때 국사교과서를 통한 용어변천을 살피는 방법이 가장 유용할 것이다.

1) 1949년판 <<우리나라 역사>>

문교부가 검정하여 간행한 중등사회과 교과서용으로 1949년판(1953년 5판 인쇄) <<우리나라 역사>>(유홍렬 著, 조문사)를 살펴보자. 좀 길지만 관련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3. 동학란 : 동학운동은 최제우가 사형된 후 최시형이 제 2세의 교주로 되어 고종 17년에는 동경대전을 지어내서 전교한 결과 삼남지방은 물론 강원, 황해, 평안도에까지 퍼져 한 때 10만의 신도를 얻었다. 이리하여 최시형은 충청도 보은에 근거지를 두고 고종 29년에는 최제우의 죄 없음을 정부에 상소하고, 다음 해에도 많은 교도가 서울 대궐 앞에까지 와서 이것을 간청하였다. 이와 전후하여 흉년과 관리의 착취로 허덕이던 백성들은 이 운동에 호응하여 고종 27년부터 전라, 경상, 충청, 경기, 평안도 등 각처에서 반란을 일으키었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동학교도의 요청을 거절하니, 그들은 보은에 모여서 불온한 형세를 보이며 정부에서 보낸 어윤중의 말도 듣지 않았다. 때마침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은 고종 31년(1894)에 수 만 명의 백성을 써서 만석보라는 물보를 수리하고, 그 혜택을 입은 농민에게서 물세를 받아 제 배를 채웠다. 이

에 분개한 농민은 그해 3월에 동학교도 전봉준의 지시를 받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포악한 정치를 제거하여 백성을 구제하고 서양인과 왜인을 물리치자'라고 외치니, 많은 백성이 이에 쏠리고 조병갑은 도망하였다. 이에 놀랜 전라감사 김문현은 군대를 보내어 치게 하였으나, 도리어 고부 백산 싸움에서 대패하고 전라 병사 홍계훈이 거느린 800명의 관군도 각처에서 실패하였다. 이에 용기를 얻어 동학군은 정읍, 태인, 금구를 거쳐 전주를 점령하니 그 여세는 경기, 충청, 경상도 지방에까지 파급되었다. 홍계훈이 거느린 관군은 전주성 밖에서 이것을 포격하니, 때마침 최시형은 손병희를 보내어 폭동을 정지하라고 명하고, 청병의 출동도 전하고 있어, 전봉준은 40일 만에 전주에서 물러났다. 전봉준은 그 후 다시 일어나서 전주, 공주를 소란하게 하다가 그 해 6월에 관군에 잡히어 사형되었다."

이 책에서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을 왕조에 대한 반란이라는 의미에서 동학란으로 표기하였고, 발생배경도 동학교단과의 관련 속에서 흉년과 관리의 착취로 인한 농민저항이 고조되었을 때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이 계기가 되어 끝내 '동학란'으로 터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동과 19세기 전 시기를 통한 농민봉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른바 반봉건·반외세의 역사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불온한 반란의 차원에서 처리하는 극히 피상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농민군이 40일만에 전주에서 물러났다는 것과 그 해 6월에 전봉준이 체포되어 사형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의 오류이다. 농민군은 4월 27일(이하 날짜는 음력으로 표기)에 전주성에 입성하여 5월 7일에 퇴각하였으니 10일 남짓 머물렀을 뿐이고, 전봉준이 체포된 것은 1894년 12월 2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퇴각하여 집강소를 통한 폐정을 혁파하고 농민통치를 단행한 사실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대가로 쟁취한 집강소통치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의의를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농민군의 활동이었다. 그리고 농민군이 9월에 다시 일어난(2차 기병) 원인이 다름 아닌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6월 21일)과 친일정부 수립에 있었는데, 이 사실도 빠져있다.

그밖에도 일일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숱한 문제점과 오류가 보인다. 이는 그 시

기가 건국의 초기였고, 해방 직후 학계의 연구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일제 식민지시기에 나온 관련자료나 연구논문들을 참고하였더라도 그러한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23]

따라서 위의 교과서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체제에 불온한 세력이 일으킨 반란 정도로서 보아왔던 기존의 시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서술이 교과서에 그대로 채용되는 동안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그에 참여한 농민군 및 후손들은 역사의 음지에서 고통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는 다름 아닌 일제의 잔재를 청소하고 민족통일정부 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부과되었던 만큼, 갑오동학농민혁명을 사회변혁운동과 민족투쟁운동의 관점에서 읽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여 위의 교과서가 그때 역사적 과제에 얼마나 부정적일 수 있었던 가를 추측케 한다.

2) 1956년판 고등학교 <<국사>>

다음은 역시 문교부가 검정한 1956년판(1960년 추가 인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인 <<국사>>(이병도, 일조각)를 살펴보자.

이 책은 'Ⅸ. 쇄국정책과 개국 후의 혼란'이라는 장(章) 속에 '2. 나라의 개방과 그 후의 혼란' 이라는 절(節)을 두었고, 이 절 속에서 '동학란과 갑오경장'이라는 항목으로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다루었다. 이 책에서도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여전히 '동학란'으로 표기되어있다. 관련 부분을 인용해보자.

"동학은 교조 최제우가 죽은 후 제 2대 교주 최시형을 중심으로 하여, 침체하였던 교세를 만회하여 삼남을 위시하여 타도에까지 퍼지더니, 마침내 고종 31년 동학란의 폭발을 보게 되었다. 먼저 광제창생을 표방하던 동학은 농민들의 불평과 합류하여 제폭구민의 단체행동으로 발전하고 있더니, 탐학한 고부 군수 조병갑이 가렴주구를

23) 이 시기에 나온 관련자료나 연구논문은 <<동학농민전쟁 연구자료집(1)>>(동학농민전쟁 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여강출판사, 1991)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관련자자료와 연구논문이 '한국인에 의한 연구', '일본인에 의한 연구', '동학사상연구', '동학교단 및 읍지의 기록', '잡지를 통한 연구' 등으로 분류되어 일제 시기의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치지 아니하매, 동학 교도를 중심으로 한 민중들이 전라도 지방의 동학접두 전봉준을 두목으로 삼고, 난을 일으켰다. 처음 관군을 대파하고 전주 일대를 점령하여 기세를 올리었으나, 정부가 청한 청나라의 원군이 올 것을 알게되자 사기를 잃고 해산하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뒤 동학군은 일군의 입국과 청·일전쟁에 자극되어 전주에서 다시 기병하여 척왜를 부르짖고 공주에 진격하였다가 관군, 일군에게 패하여 난의 종말을 보게되었다.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한 이 농민전쟁은 처음 그 기세가 내외의 주목을 끌만큼 굉장하였으나, 이를 영도할 만한 인물이 없었고, 비조직적, 무계획적인 폭동에 불과하였으므로 실패하고 말았다."

우선 이 책은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여전히 '동학란'일뿐 아니라,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사회개혁의 노력들을 '혼란'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었다. 혼란이란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타기(唾棄)되어야 할 상태라는 것이니 역시 이 책도 앞의 책 <<우리나라 역사>>와 마찬가지의 왕조사관적 역사서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책은 앞의 책 <<우리나라 역사>>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였던 흉년과 관리의 착취를 슬그머니 빼버리고 농민들의 불평에 조병갑의 가렴주구가 겹쳐 동학교도들 중심으로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농민군이 호남의 심장부인 전주성을 점령하였다는 사실을 전주 일대를 점령하였다는 식의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대신하여 농민군의 전과를 희석하고 있다. 역시 이 책에도 집강소를 통한 농민적 개혁이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한 사실이 빠져있다.

결국 이 책은 동학교도 + 농민들의 불평 + 조병갑의 가렴주구 = 갑오동학농민혁명이라는 등식으로 농민저항을 다루었고, 갑오동학농민혁명은 곧 혼란이니 조정에서 갑오경장이라는 개혁을 단행하여 갑오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사회불안과 혼란 요인을 제거하였다는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농민들의 단체행동은 불평에서 비롯된, 사회혼란을 야기 시키는 것이고 거기에다 동학교도같은 불순(?)세력이 단체행동을 이끌었다는 식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 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갑오동학농민혁명이 비조직적이며 무계획적인 폭동에 불과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서술인데, 이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어떠한 역사적 의의와 역할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민중적 역사인식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민중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사회변혁의 코

스를 관심밖에 두었던 이러한 역사서술은 곧 이은 1960년의 4·19혁명과 같은 민중적 저항을 거부하고 싶은 보수적 시각을 대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3) 1965년판 중학교 <<중등국사>>

문교부가 검정하여 간행한 1965년판 중학교 사회생활과 교과서인 <<중등국사>>(이병도, 을유문화사)를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Ⅶ. 근대화하여가는 조선사회'라는 장 속에 '2. 동란(東亂)과 개혁(改革)'이라는 절로 다루어 좀더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용어는 '동학란'으로 하였다.

주요 내용에서는 1956년판의 <<국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다만 발생원인으로서 "이 때 조정은 여전히 민씨의 세도판으로 벼슬을 상품과 같이 돈으로써 매매하고, 지방 관리와 토호들의 행패는 점점 심하여 민중의 불평이 식을 날이 없었으며, 동학교도를 많이 포함한 농민의 움직임은 더욱 험한 물결과 같았다."고 하여 조정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삽입하여 농민군의 반봉건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나 '민중의 불평' 때문에 일어난 난리라는 기본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밝힌 부분에서 "동학란은 당시 부패한 상류층에 대한 반항 운동이었다. 본시 훈련이 없는 무리이므로 실패로 돌아갈 것은 뻔한 일이었다."고 하여 상류층에 대한 반항 운동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중의 역량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서술을 보여주었다. 1956년판 <<국사>> 보다도 더욱 후퇴한 역사서술이었다.

이러한 지배층 중심의 역사는 "민중은 오로지 지배층이 마련해 주는 안정과 질서 속에서 체념하고 사는 것만이 착한 백성이고 평화로운 세상은 그러한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고, "민중이 사회의 모순을 체감적으로 인식하고 보다 잘 살기 위해 각성하고 단결하는 것을 이른바 난동, 소요, 반란"[24]이라는 관점 아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은 모두 난리나 반란으로 취급해왔다. 갑오동학농민혁명도 이러한 관점에 따라 1894년 이후 1960년대까지 '동학란'으로 불리워져 난리·소요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한국사 인식은 적어도 갑오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24)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지도서>>(국사편찬위원회, 1999), 3면.

보는 한 구한말에서부터 1960년대까지 한 치의 발전도 없이 정체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학란'이라는 용어를 줄기차게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교과서는 민중의 각성과 주체적 노력을 부질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한편, 체제가 만들어주는 질서 속에서 안주하고 사는 민중의 상(像)을 주입하는 지배층 중심의 사관을 전파할 뿐이며, 나아가 1960년대 산업화 추세에 적합한 순하고 부지런한 노동자 상(像)을 만드는데 기여할 따름이다.

이러한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중등국사>>의 역사서술은 필자의 역사적 관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 4·19혁명을 붕괴시키고 등장한 5·16 군사정권의 출범이라는 정치·사회적 변동에 따른 발빠른 대응으로 판단된다.

4) 1970년판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가 검정하여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동학혁명'으로 표기한 1970년판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서인 <<국사>>(이홍직, 동아출판사)를 살펴보자.

이 책은 '동학혁명'이라는 용어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이는 1963년 군사정권의 주도로 '동학혁명기념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해 10월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정읍시 황토재에 세워지면서 '동학란'이란 용어가 '동학혁명'으로 바뀌어지고 있던 그때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때의 용어변경은 학문적 성과와 대중적 인식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된 기념탑 건립 등 정치적 의도를 갖는 사업의 영향이 우선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변화가 있었다. 우선 관련부분을 인용해보자.

"동학혁명 : 외세에 의존하여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려는 조선정부는 농민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심한 압박을 가하였고, 일본을 필두로 한 외국 세력의 침투는 농민 생활을 계속 위협하여 농민들은 스스로 어떠한 타개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

었다. 그들 농민들의 항쟁은 동학의 전파와 함께 사회의 표면에 나타났다. …동학혁명은 농민들이 주동이 되어 점점 그 세력을 확대해 가던 동학의 포 조직을 이용하여 일으킨 대규모적인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그 난을 지도한 것은 동학 교도들이었으나 그 중심 세력이 된 것은 농민이었다. 농민들은 정부와 양반 관료들의 무작정한 압박에 대한 반항으로서 일어난 것이며 악정을 개혁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 외국 세력의 침투에 대한 민족적인 반항으로서 일어난 것이므로 일본 및 서양 여러 세력을 구축할 것을 부르짖었다."

첫째, 외세에 의존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던 조선정부와,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투가 농민항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모두(冒頭)에 분명히 하였다. 이는 곧 반봉건·반외세의 농민항쟁이라는 역사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둘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중심세력이 동학교도가 아니라 농민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이 단순히 동학교도들의 교조신원운동이나 포교차원이 아닌 19세기 동안 진행되어온 농민항쟁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반봉건투쟁의 결정판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악정(惡政)을 개혁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려는 목표 아래 진행된 사회변혁운동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운동으로서 일어났다는 것을 역시 처음으로 밝혔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이 19세기 반봉건 농민항쟁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외세 민족항쟁을 이끌어낸 '혁명'이었다는 것이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비로소 반봉건·반외세의 사회변혁운동과 민족투쟁운동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농민을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중심세력으로 두었으면서도 용어에서는 농민을 뺀 '동학혁명'이라 표기한 점에서 19세기 농민적 이해관계를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정부측과 천도교측의 용어였던 '동학혁명'을 그대로 따른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집강소 통치와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 사실이 역시 빠져 있어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아래 <표 1>은 이 시기 개정판에 따른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용어의 변천을 정리한 표이다.

<표 1>

	교과서 종류	역사용어
1949년판	중등 사회과 <<우리나라 역사>>	동학란
1956년판	고등학교 사회과 <<국사>>	동학란
1965년판	중학교 사회생활과 <<중등국사>>	동학란
1970년판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동학혁명

5.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용어의 변천과 서술상의 문제점 2 : (국정 국사교과서 시기)

1) 1975년판 중학교 <<국사>>

'동학란'에서 '동학혁명'까지 용어의 변천을 보였던 검정교과서 체제는 74년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뀌면서 서술형식과 발행체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국정으로 바뀐 첫 교과서인 75년판 중학교 국사교과서인 <<국사>>를 검토해보자.

이 교과서는 'X. 개화 척사운동과 동학혁명[25]'이라고 하여 각 사회운동을 따로 독립시킨 장(章)이 주목된다. 이 장안에 포함된 절, 항목을 적어보자.

1. 나라의 개방
   (1) 쇄국에서 개방
   (2) 구미 여러 나라와의 통교

2. 개화와 보수의 대립
   (1) 개화운동
   (2) 개화파와 보수파의 대립
   (3) 임오군란
   (4) 청나라의 간섭
   (5)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3. 외세의 경제적 침투
   (1) 열강의 다툼
   (2) 일본의 경제적 침투

---

25) 1974년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는 '동학혁명운동'이라 하였다. 중학교에서는 '동학혁명'이라고 하였다가 고등학교에서는 '동학혁명운동'이라고 한 것은 성공하지 못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성격를 밝히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이지만 중·고등학교 국정 교과서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역사용어를 각기 달리하였다는 것은 통일된 역사상을 제공하려는 국정체제에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혼란은 1979년판에 가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난다. 즉 중학교 교과서에 보이지 않는 '농민'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보인다는 점이다. 자세한 것은 1979년판 교과서를 다루는 본문에서 언급하겠다.

4. 동학 혁명

(1) 일본상품의 농촌침투와 방곡령

(2) 농민의 불만과 자각

(3) 동학 혁명

(4) 청 · 일 전쟁

5. 근대적 제도의 마련

(1) 갑오경장

(2) 갑오경장의 의의와 홍범 14조

우선 장, 절, 항목을 살펴보면 앞 시기의 교과서보다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 외세의 경제적 침투'를 '4. 동학 혁명'에 앞선 절로서 다룸으로써 외세와의 관계에 더욱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 동학 혁명' 안에 '일본상품의 농촌침투와 방곡령', '농민의 불만과 자각'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외세의 침략, 그 중에서도 경제적 침략에 대한 농민의 불만과 자각으로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음을 재차 환기시키고 있다. 서술 내용에서도 "동학 혁명군은 관군을 물리치면서 북진을 계속하여 전주를 점령하였다. 그들은 일본 세력의 배격을 내세우며 싸웠으나, 일본군의 도움을 받은 정부군에 의하여 진압되고, 전봉준도 체포되었으며, 많은 농민과 교도들이 학살되었다. 동학혁명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이는 광범위한 농민들을 배경으로 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농민전쟁으로서, 스스로의 개혁운동이며, 외국 세력을 몰아내려는 민족 운동이요 혁명 운동이었다."고 하여 국내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보다는 일본 세력에 대한 저항을 중심 과제로 삼아 민족운동과 혁명운동으로서 전개되었다는 것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학계와 일반인의 동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정교과서로서 '국난극복과 주체적 민족사관에 투철한 국적 있는 교육'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측의 의도와 관련이 깊다. 정부는 1973년과 1974년에 걸쳐 제 3차 교육과정(1974~1981)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그 기본 방향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에 두었고, 기본 방침은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 · 기술 교육의 쇄신"에 두고 있었다. 특히 국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① 민족 주체의식의 고양 ②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 창조 ③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를

강조[26]하였는데, 여기서 '민족 주체의식의 고양'은 곧 역사서술에서 자국 내의 사정보다는 외세의 침략과 그에 대한 저항을 비중 있게 다루는 쪽으로 조정하게 하였던 것이다. 한국사에서 외세의 침략과 그에 대한 저항을 비중 있게 다룬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방향이 유신체제가 출범된 이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한 '국적 있는 교육'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에서 외세에 대한 항쟁과 민족의식을 강조한 것은 유신체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단행한, 국난극복의 '민족주체적' 용단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곧 유신체제가 내세운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홍보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었다. 결국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서술에서 드러난 국사교육의 강화는 국가와 유신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갖도록 의도된 것이었다.[27]

1975년판 교과서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외세, 특히 일본군과 싸운 항일민족운동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난 것은 주목할만하나, 그것이 유신체제의 정당성과 '한국적 민주주의'를 홍보하는 차원과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올바른 평가는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2) 1979년판 중·고등학교 <<국사>>

제 3차 교육과정에 따라 두 번째로 간행된 1979년판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각각 검토해보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용어가 각기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동학혁명운동'이라 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동학농민혁명운동'이라고 하여 항쟁의 주체로서 '농민'을 처음으로 밝혀 놓았다. 이는 대단한 진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농민'을 빼고 고등학교에서는 '농민'을 밝힌 것은 아무래도 혼란스럽다. 이는 집필자(중학교: 이현종, 고등학교: 윤병석)가 달랐다는 점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항쟁의 주체를 '동학교도'로 보느냐 아니면 '농민'으로 보느냐에 따라 '농민'이라는 용어가 빠지거나 들어가는데, 이는 19세기 사회·경제적 흐름에 따른 모순의 담지자가 누구며, 이들이

26)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교육부, 2000), 52면.
27)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서강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1997), 172~177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계급의식을 갖고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였느냐 하는 것을 밝혀주는, 연구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항쟁의 주체를 밝히는 이 문제는 교과 과정에 따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다. 아무리 국가의 의도가 전적으로 반영되는 국정 교과서라 하더라도,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내용과 교과목표가 다르게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일치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결국 '역사인식상의 대혼란'이라는 엄청난 피해는 학생들, 나아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79판 고등학교 교과서 <<국사>>에 나타난 주목할만한 변화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록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르게 쓰고 있지만 역사용어상 '농민'이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이 19세기 농민봉기의 계승으로 일어난 것이고, 또 농민이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주체 세력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서술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전주성에서 정부측과 화약을 맺고 농민군이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치안과 재정을 맡아보았다는 사실을 역시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이다(그러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빠져있다). 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의의를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농민군의 활동이었다. 그러므로 갑오동학농민혁명을 서술할 때 빠져서는 안될 핵심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앞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무계획적이거나 단순한 폭동으로 몰고 가는 근거로 삼았다. 농민군이 집강소를 통해 폐정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이 교과서에 밝혀짐으로써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새로운 근대 사회로 전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룬"[28] 반봉건 사회변혁운동으로서 역사적 위상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군은 그 해 9월에 들어, 일본군이 궁궐에 침입하고, 민씨 정권을 몰아내며 친일 정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청·일 전쟁을 도발함으로 보고, 다시 일어나 구국항쟁을 벌였다."고 하여 농민군이 9월에 2차로 기병하게 된 원인이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과 친일정부 수립, 그리고 청·일전쟁의 도발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갑오동학농민혁명은 반외세 민족투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확보하게 되었다.

---

28) 고등학교 <<국사>>(문교부, 1979), 238면.

이러한 중요한 변화와 함께 1974년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사용된 '혁명운동'이라는 용어가 1979년판에서부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성공하지 못한 혁명이지만 그 영향이 지대한 사회운동이라는 성격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판단된다.[29]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혁명적 맥락에서 이해하여 '혁명'이라는 용어를 큰 저항없이 사용하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역사에는 너무나 혁명이 없어서 그런지(?)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혁명이라는 생각이 들어 착찹하기 그지없다.

3) 1982년판 중·고등학교 <<국사>>

제 5공화국 출범과 함께 처음 간행된 1982년판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국사>>를 살펴보자. 서술내용과 체제면에서 1979년판과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1982년판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70년대에 일관되게 쓰여오던 '혁명'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운동'이라는 용어로 뒤바뀌고, '농민'이라는 용어도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단순한 '동학운동'으로 되고 말았다. '동학란'이란 용어가 사용된 이후 가장 개악(改惡)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민'과 '혁명'이 빠진 역사용어로서의 '동학운동'은 '동학란'처럼 철저하게 왕조적 관점과 지배층 중심의 악의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역사를 아무런 열정도 없이 바라보겠다는, 그래서 역사에서 어떠한 교훈도 끌어내지 않고 또 어떠한 실천적 대안도 모색하지 않겠다는 무색무취한 용어에 다름 아니다. 이는 역사를 박제화시켜 역사의 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조치로 보인다. 결국 은연중에 역사의 진실을 묻어버리는 역사 왜곡의 다른 형태일 것이다.

그 동안 학계의 연구가 특별히 후퇴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 당시 문교부에서 이 문제를 맡았던 관리의 글이 있어 그 실무적인 처리과정을 살필 수 있다.

---

29) 여기에 대해 형태적 의미와 역사적 사회적 성격으로 나누어 설명한 '신용하'의 흥미있는 견해가 있다. "필자는 오랫동안 이 주제를 공부해오면서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은 형태상으로는 '농민전쟁'이지만, 역사적 사회적 성격에서는 '농민혁명운동'이라 생각하고 있다. '농민혁명'이라고만 하지 않고 '농민혁명운동'이라고 하여 '운동'을 붙이는 이유는 이 운동이 완전히 성공하여 집권하지 못하고 '운동'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신용하, 앞의 책, 368면.

"나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역사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리고 이 난을 '혁명'이나 '농민전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몇몇 학자들을 만나 보고 국편의 의견도 들어보았으나 모든 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역사용어를 만들어내기란 어려웠다. 그러나 나 나름대로 동란을 혁명이나 농민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는 동학사상 자체를 혁명의 원리로 보기 어렵고, 이 난은 동학의 포교활동, 교조신원운동(敎祖伸寃運動) 등 교문 자체의 운동이 전봉준이 주도한 고부민란을 기폭제로 동란으로 확대되었으며, 여기에 농민이 적극 가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민전쟁은 농민의 계급적 이익이 바탕이 되어야 하나 이들은 민족적인 문제를 표방하여 노임전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였고, 또 근왕적인 성격을 보여 혁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동란이 '농민'과 '혁명'의 성격을 띠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역사용어를 종래의 '동학농민혁명운동' 대신 '동학운동'으로 잠정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1차적으로 교과서 집필자와 의논하고 국사과 1종 도서심의 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도록 하였다. 심의회의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었으나 대체로 나의 안이 현재로는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로써 1982년도판 국사교과서에는 공식 역사용어로 '동학운동'을 사용하기로 하고 이규호 장관에게도 이를 보고하고 확정하였다."[30]

'동학운동'으로 확정하는 과정은 비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담당 관리의 의견이 사실상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정교과서체제로 변경할 때도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검토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문교당국이 국정화를 강행한 전례를 보면 위원회는 장식적 기구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동학운동'으로 결정된 것은 학계의 성과와 의견을 무시한 채 당시 문교부의 의도에 따라 담당 편수관이 시안을 작성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통고하고, 심의원원회에서는 이를 요식적 절차로서 검토한 후 시안대로 확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이 교과서 집필자로 참여하였던 이현희 교수가 자신은 원고에 '동학혁명'이라고 하였는데 '동학운동'으로 바뀌었다고 밝히자, 여기에 대해 이 담당 관리는 "그러나 ㅇ교수가 집필한 부분은 동학과 관계없는 부분이었다. ㅇ교수가 자기가

30) 윤종영, 앞의 책, 329~330면.

쓴 것으로 착각했거나 다른 숨은 의도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설혹 자기가 집필하였다 하더라도 교과서는 개인의 저서가 아니므로 저자의 뜻과 관계없이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 뒤 이에 대해 별다른 반향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를 묵살해버리고 말았다."[31]고 말하여, 국정교과서의 내용은 필자에게 통고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는 것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필자의 서술의도와 용어선택은 애초에 의미 없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담당 관리의 눈에는 역사학의 학문적 성과는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아니고 정권이나 편향된 정부의 이념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구성하고 요식적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일만이 오직 관심사일 뿐이다. 그 때까지 교과서에서 사용해 오던 '동학농민혁명운동'이라는 용어를 묵살해버리고 '동학운동'으로 바꾼 결정은 학계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당시 군사정권의 성격이 더욱 강화된 제 5공화국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교과서의 용어가 무색무취하게 바뀌면서 역사의 본질을 은폐시키자 국회 문공위원회에 "동학혁명운동이 혁명이 빠진 '동학운동'으로 그 제목과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 바, 이는 민족사적 중대과오다"는 취지의 '국사교과서의 동학혁명 내용 부활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고(1982년 8월 20일자), 1983년 11월 25일부터 청원심사가 열렸다. 관련 의원들의 역사용어 변경 경위와 변경에 대한 추궁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학계의 고유 영역이므로 앞으로 문교부에서 국회의 뜻을 잘 헤아려 이 문제를 계속 검토, 교과서 편찬에 잘 반영해 줄 것을 추구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32] 결국 문교부의 손에 이 문제는 다시 넘어왔고, 문교부는 그 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기존의 관점과 용어를 그대로 지키는 현상유지책을 고수했다.

역사용어에 대한 선택이 학계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일 뿐, 학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시기에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갑오동학농민혁명이 '동학운동'으로 평가절하되었고,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민족사회에 대한 실천적 대안과 혁명 정신은 차단되었다. 이는 국사학계와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시련이면서 한국사회의 수난이었다.

---

31) 윤종영, 앞의 책, 330~331면
32) 윤종영, 앞의 책, 331~340면 참조.

그밖에 주목할만한 변화는 국사교과서가 상·하 양권이 되면서 좀더 서술분량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집강소 통치기에 실시된 12개조 정치 개혁의 요강이 처음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이는 피상적으로 집강소 개혁을 다룰 때와는 달리 집강소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집강소 12개조 폐정개혁안을 인용해보자.

①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②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③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④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⑤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⑥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강갓[平壤笠]을 없앤다
⑦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⑧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⑨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⑩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⑪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⑫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分作)한다

그런데 당시 문교부 측이 '동학운동'이라는 역사용어를 고수하는 동안 오히려 국사학계에서는 사회의 민주화운동에 자극받아 19세기 사회변혁운동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역사의 주체가 민중이라는 시각이 확립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고, 이에 따라 '민중사관'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관점으로 한국의 전 역사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조류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역사연구단체들이 나타났고, 이 연구단체를 통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이르러 연구성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눈부실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는 국정교과서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민중적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4) 1990년판 중·고등학교 <<국사>>

제 5차 교육과정(1988~1992) 개편으로 간행된 1990년판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국사>>를 살펴보자. 서술내용과 체제면에서 1982년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용어상에 변화가 나타났다. '동학운동'이 '동학농민운동'으로 바뀌었다. '농민'이라는 주체세력을 밝힌 것인데, '동학교도'만이 아닌 '농민'이 대거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역사인식상의 커다란 변화를 반영한다. 1970년대 교과서에서 이미 인정되었던 '농민'이 1982년 판 교과서에서 묵살되었다는 것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출범이라는 정치적 변동에 따른 국사교과서의 퇴행을 뜻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사회를 크게 달구어 왔던 민주화운동의 급신장과 국사학계 안에서의 진보적 역사학자들의 노력으로 '농민'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는 국정교과서가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던 대세였다. 따라서 동학교도들의 무색무취한 종교운동이라는 관점으로 몰아가려는 1980년대 정치적 의도가 제지되고, 그때 사회구성원의 80%를 차지하던 '농민'이 정부의 무능과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러한 변화는 놓칠 수 없는 큰 변화였다.

그러나 여전히 '혁명'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운동'이라는 용어가 쓰여졌다는 것은 국정교과서의 보수성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로부터의 급격한 혁명을 인정할 수 없고, 또 농민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로 일어난 '계급투쟁'이라는 관점도 인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보수성이 결국 아무런 색깔도 없는 '운동'이라는 용어로 귀결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도 서술내용상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다. 이 또한 위의 사회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즉 1982년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던 내용이 1990년판에 복원되면서 좀더 자세한 경위가 설명되었다는 점이다. 전주성을 점령하는 등 농민군의 세력이 커지자 정권유지에 위기감을 느낀 척족 민씨세력이 농민군을 진압하고자 청나라에 군대파병을 요청한 사실의 인과관계를 좀더 보강하였다. 1982년판 중학교 교과서에서 "동학운동이 일어나자, 청은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 군대를 파견하고, 텐진조약에 의거하여 군대를 파견함을 일본에 알렸다."라고 하여 우리 정부(민씨세력)의 무능력과 위기위식에 대한 설명없이 곧바로 청군의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그런데 1990년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각각 왜 민씨세력이 청군의 파병을 요청하였는지 소

략하나마 그 이유를 밝혔다. 1990년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각각 인용해보자.

고등학교: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청에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청이 파병하게 되자, 일본도 텐진조약을 구실로 삼아 군대를 보내어 마침내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중 학 교: 동학 농민군의 세력이 커져가자, 이를 막아내는데 자신을 잃은 정부는 청나라에 군대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청이 군대를 보내 오자, 일본도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국내 문제에 외국이 간섭하게 되었다.

위의 서술내용에서 척족 민씨 세력이 농민군을 막아낼 능력과 자신이 없자 정권유지에 위기를 느끼고 청군을 불러들인 것이 분명해졌다. 여기에 대해 강재언 교수는 "정부군으로서는 진압할 방법이 없고 봉건적 지배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자, 청군의 출병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일본군의 무력간섭을 일으켜 청일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이는 민씨 일파가 이미 국내의 세력관계에서 그 일파뿐만 아니라, 봉건적 지배 자체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하며, 또한 그의 매판적 성격 때문에 한국의 부르조아 발전의 혁명적 코스가 저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33]고 하여 민씨 세력의 반민족이고 반민중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위기적 상황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결국 민씨 세력의 정권적 욕심이 청·일 양군을 조선에 불러들여 조선이 근대사회로 발전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990년판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척족 민씨세력의 무능력과 정권유지 의도를 왜 지적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을까. 그것은 의도적인 측면이 짙다. 민씨 정권의 반민족적 행위를 은폐하고, 결과적으로 청·일 양군의 조선상륙과 청·일전쟁의 발발 이유를 농민봉기 쪽으로 떠넘기기 위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두루뭉실하고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왜곡된 역사교육은 오래가지 못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영향과 진보적인 국사학계의 노력으로 1990년판 교과서에서는 그 왜곡과 은폐의 장막이

33) 강재언, <<신편 한국근대사연구>>(한울, 1986), 140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농민'이라는 용어를 되찾고, 비록 소략하게나마 1990년판 교과서에서 그때 민씨 정권의 부정부패와 통치력의 상실 때문에 외국 군대의 상륙을 비롯한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5) 1996년판 고등학교 <<국사>>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6차 교육과정(1992~1997) 개편으로 간행된, 가장 최근의 국사교과서인 1996년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살펴보자. 1996년판은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는 최근의 개정 교과서인만큼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우선 1990년판과 비교하여 장, 절의 구성을 살펴보자(<표 2>참고).

1990년판과 1996년판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목차상의 차이는 없다. 다만 갑오동학농민혁명 앞에 일어난 임오군란(1882년)과 갑신정변(1884년)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갑오동학농민혁명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1990년판에서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근대 사회의 전개'라는 절에서 다루었고 '근대 의식의 성장과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절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6년판에서는 목차상의 구성을 바꾸어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근대 의식의 성장과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절에서 항목만 달리하여 갑오동학농민혁명과 함께 다루고 있다. 즉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민족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함과 동시에 근대화를 추진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갑신정변에 대한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갑신정변은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고, 역사 발전에 합치되는 민족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우리나라 근대화 운동의 선구였다."고 하여 근대화의 프로그램과 함께 민족운동을 이끈 그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반면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1990년판에는 보이지 않던 "그러나 동학 농민운동은 근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성을 지녔으며,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 침략군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서술내용을

삽입하여 그 한계와 열등한 군사력을 애써 지적하였다.

<표 2>

	1996년판	1990년판
목차	Ⅱ. 근대 사회의 전개 1. 근대 사회로의 진전 (1)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 (2) 국제관계의 확대 2. 근대 의식의 성장과 민족운동의 전개 (1) 근대화의 추진 개화정책의 추진 위정 척사운동의 전개 임오군란의 발발 개화당의 형성과 활동 갑신정변과 그 의의 (2)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농민층의 동요 동학농민군의 봉기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3) 근대적 개혁의 추진 (4) 독립협회의 활동과 대한제국 (5) 항일 의병 전쟁의 전개 (6) 애국 계몽 운동의 전개	Ⅱ. 근대 사회의 발전 1. 근대 사회의 전개 (1) 흥선대원군 정치 (2) 개항과 근대사회의 개막 (3)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4) 개화당의 개혁운동 2. 근대 의식의 성장과 민족운동의 전개 (1)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농민층의 동요 동학농민군의 봉기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2) 근대적 개혁의 추진 (3) 독립협회의 활동과 대한제국 (4) 항일 의병 전쟁의 전개 (5) 애국 계몽 운동의 전개
차이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근대의식의 성장과 민족운동의 전개' 절 속에 구성하여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성격으로 접근, 다만 '근대화 추진' 항목으로 '동학농민운동' 앞에 위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근대사회의 전개' 절 속에 구성하여 '동학농민운동'과 절을 달리 구성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근대 사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갑오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제시하였던 수많은 폐정개혁안들(교과서에 인용된 폐정개혁안 12개조를 비롯하여)은 신분질서 철폐, 평균분작에 따른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 등 근대사회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전봉준이 체포되어 남긴 심문기록 중에는 새로운 국가건설에 자신의 구상을 내비치고 있다. 관련 기록을 인용해보자.

"네(전봉준-인용자)가 경성에 쳐들어온 후 누구를 추대할 생각이었는가"라고 묻자 (전봉준은) "일본병을 물러나게 하고 악간(惡奸)의 관리를 축출해서 임금 곁을 깨끗이 한 후에는 몇 사람 주석(柱石)의 선비를 내세워서 정치를 하게 하고 우리들은 곧장 농촌에 들어가 상직(常職)인 농업에 종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국사를 들어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명사에게 협합(協合)해서 합의법에 의해서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고 대답하였다(1895년 3월 6일자 「동경 조일신문」 게재, 1988년 9월호 『사회와 사상』 번역 게재).

전봉준은 '합의법'에 따라 몇 사람의 명사들이 정치를 한다는 정치적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이 때 합의법이란 농민세력이 중심이 되어 여러 정치세력이 협력하여 만든 새로운 법일 것이고, 이 법에 따라 농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몇 명의 명사가 정치를 담당-농민적 집단지도체제 혹은 연립정부(?)-하여 과거 한 두 명의 세도가가 제멋대로 자행하던 정치운영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1893년 보은집회에서 서구의 하원과 같은 민회(民會)를 거론하여 농민들의 집회를 정당화한 것을 보면, 이 때 전봉준이 거론한 정치운영은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운영과 흡사한 것으로 추론된다.

다음 군주제에 관한 전봉준의 구상을 알아보자. 그가 부패한 관리들을 축출하여 임금 곁을 깨끗이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군주제는 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농민전쟁 기간 중에 보여준 행적을 보면 그는 전통적인 군주관을 갖고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의 진술을 다시 검토하면 실제 권력의 중심은 협합정치 쪽에 두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군주는 상징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봉준의 정치구상에서 민중의 정치참여는 어느 수준이었을까. 전봉준이 정치를 맡기겠다는 '주석의 선비'와 '몇 명의 명사'는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인사이어야 했을 것이다. 여기에다 집강소 통치시기부터 존중되었던 '관민상화'(官民相和)의 원칙과 보은집회의 '민회'를 고려한다면 민중의 정치참여도는 꽤 높았을 것이다. 게다가 등용되는 관료들이 지난날의 신분기준이 아닌 인재중심으로 선발된다면 참여도는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차별적인 신분제를 거부한 이상 민중의 정치참여를 막을 이유가 있었을까.

합의법에 따른 정치운영, 신분제의 철폐, 새로운 경제질서의 확립 등을 근대 사회

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아니라 한다면 무엇이 구체적 방안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으로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 침략군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하여 일본군의 개입과 열등한 무기를 들었는데, 이 문장의 분위기로는 갑오동학농민혁명으로는 도저히 근대 사회를 이끌 수 없는, 절망적인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실패와 좌절에는 일본군의 개입에 못지 않은 보수적 민보군(유생 중심의 반농민군)의 활동과, 일본군의 괴뢰와 다름없었던 친일 개화정부의 반민족적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개입도 개입이려니와 오히려 국내 반대 세력의 적대행위로 실패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일본군을 앞세워 십 수만 명의 농민군을 학살하고 살육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면서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동학비도(東學匪徒)의 반란으로 몰아부치며 농민들을 살육한 책임을 회피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모든 기록에 마땅히 토벌해야 하는 '동학비도의 난' 혹은 '동학란'으로 적어놓았던 것인데, 이러한 인식이 1960년대 국사교과서에 "본시 훈련이 없는 무리이므로 실패로 돌아갈 것은 뻔한 일이었다."고 하여 그대로 답습되었고, 어이없게도 1996년판 국사교과서에서 또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Ⅱ. 근대 사회의 전개'라는 장의 서술 기축이 1990년판과는 달리 근대화(좀더 자세히 말하면 위로부터의 근대화[34])에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근대화, 근대성이 이 시대를 가늠하는 잣대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갑신정변이 1996년판에서는 1990년판과는 달리 '근대화 추진' 항목으로 독립되어 '근대 의식의 성장과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절 속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그 의도는 서술내용대로 갑신정변이 역사 발전에 합치되는 민족운동인 반면, 갑오동학농민혁명은 근대성을 결여하여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근대성이라는 높은 벽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역사발전과 부합하지 않는 민족운동이라는 도식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동학농민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국정교과서체제의 문제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35]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체제에 대한 재검

34) 이는 '세계화'라는 오늘날의 화두를 끌어내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근대 사회 '다시 보기'일 것이다.

35) 1996년판에서 동학농민운동으로 계속 표기하게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전쟁 또는 동학농민혁명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전쟁으로 할 경우 전쟁의 당사자가 불분명하고 혁명으로 표기할 경우 혁명의 개념을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1940년 천도교계의 역사 서술가 오지영의 '동학사'는 사료로서의 비판도 크게 제기되었음

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밖에 서술내용은 1990년판과 차이나는 부분이 거의 없다.

이상 1996년판 교과서까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1996판 교과서에 이를 때까지 어느 교과서에도 전혀 다루지 않고 간과해버린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모든 국사교과서가 갑오동학농민혁명을 호남지방에 한정하여 서술해왔다. 그러나 호남지방은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중심 지역일 뿐이고, 갑오동학농민혁명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 전개과정상의 치열함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는 조선봉건체제에 대한 농민적 모순이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진행된 결과이고, 청·일 두 나라의 경제적·군사적 침략이 역시 조선의 전 농민에게 동시에 고통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사교과서에서 호남지방만을 다룬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을 한 지역적 수준의 농민항쟁으로 격하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그 역사적 성격과 의의를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 된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은 호남지방만의 역사가 아니다. 차기 국사교과서에는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

그밖에 보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했을 때 농민군만이 이에 대항하고자 9월에 다시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당시 친일정부는 자국민을 진압하는데 일본군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한 반민족적·반민중적 행위를 저지른 점, 이 결과 십 수만 명의 자국민이 살육되었다는 점, 이러한 행위가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일제의 강점이라는 식민지화를 초래하는 초석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 못지 않게 청나라의 경제적 침략도 심각했다는 점등이 발견된다. 이러한 점들도 차기 국사교과서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적당히 넘어가거나 계속 은폐되어 있는 한 우리는 과거로부터 역사적 통찰력을 얻는데 실패할 것이고, 과거의 어두운 역사적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을 감안하였다. 더욱이 전봉준은 혁명가라기 보다는 당시 집권세력인 명성황후 척족 세력을 타도하고 대원군 중심의 보수 정권을 재건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봉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현행대로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여전히 보수적인 절충에 의해 역사용어가 타협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국사교과서는 더 이상 정권의 도구도 아니고, 민족의 찬란함만을 보여주는 반쪽의 '거울'도 아니다. 민족의 자긍심이 역사의 은폐로부터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의 은폐와 과장으로부터 도달하는 곳은 자기 기만과 이웃으로부터 불신이라는 막다른 골목일 것이다. 이웃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그때 우리는 얼마나 이웃 일본을 규탄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던가. 그러나 언제까지 이웃만을 손가락질하고 흥분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를 돌아볼 차례이다.

다음 <표 3>은 이 시기 개정판에 따른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용어의 변천을 정리한 표이다.

<표 3>

	교과서 종류	역사용어
1974년판(75년판)	1974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동학혁명운동
	1975년 중학교 국사교과서	동학혁명
1979년판	고등학교	동학농민혁명운동
	중학교	동학혁명운동
1982년판	중·고등학교	동학운동
1990년판	중·고등학교	동학농민운동
1996년판(97년판)	중·고등학교	동학농민운동

6. 북한 역사교과서 검토

지금까지 우리의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명명되었고 서술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의 국사교과서는 검인정과 국정체제를 거쳐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오는 동안 용어에서부터 서술내용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문적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동학란'이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불리게 되는 등 지배층 중심의 역사에서 민중의 역사로 전환되어갔음을 보았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의 역사는 남북의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어느 시기보다도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는 남북통일이라는 문제를 자기 인식의 내부에 포함시키고 있어야 한다. 이제 한국의 역사는 북한사회에로까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북한사회를 한국사 안에 어떻게 위치 지울 것인가 숙고해야 하고, 그런 숙고가 차기 국사교과서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번에는 북한 고등중학교 역사교과서인 <<조선력사>>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보자.

우선 <<조선력사>>(고등학교 4, 1982년판)에서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을 '1894년 농민전쟁'으로 명명하였다. 명칭에서 '동학'이 빠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갑오동학농민혁명에서 동학교단의 역할을 그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오히려 조선 봉건사회가 부과하는 모순의 담지자로서 농민들이 19세기 초부터 끊임없이 일으켰던 항쟁의 발전으로 본다. 그리고 이 항쟁은 전 근대사회(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최후의 형태로서 부르주아 혁명을 추동하였다는 뜻에서 16세기 독일농민전쟁의 개념을 빌려와 '농민전쟁'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이 용어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다음 서술내용을 살펴보자. 갑오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기 전 나라 안팎의 사정은 우리의 <<국사>>와 비슷하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고부봉기가 계기가 되어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본 것도 우리와 일치한다.

그러나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전투상황에 대한 서술이 좀더 상세하고, 특히 폐정개혁안과 집강소에 대한 성격규정에 지면을 많이 할애하였다. 관련 부분을 옮겨보자. 먼저 폐정개혁안 12개조에 대해서 "폐정개혁안에는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이 다가온 조건에서 민족내부의 대립과 싸움을 그만두고 인민과 국가가 공통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인민들의 애국심이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일제를 비롯한 외적과 내통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반침략사상이 담겨 있었다.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1894년 농민전쟁이 단순한 농민들의 투쟁이 아니라 반침략 반봉건투쟁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부르조아민족운동의 한 고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1894년 농민전쟁은 그 후 부르조아개혁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였다."고 하였고, 집강소에 대해서는 "집강소는 본래 폐정개혁안을 실현하는데서 지방통치기관을 돕기 위하여 내온 것 이였으나 이 시기 지방통치기관들이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 하였다. 폐정개혁안을 통해 반침략 반봉건투쟁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부르조아개혁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였다. 집강소는 사실상 유일한 행정기관으로 해석하여 농민군 주둔지역에서 농민통치가 실시된 것으로 보았다.

다음 주목할 부분은 갑오동학농민혁명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농민군이 학살된 수를 30만~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점이고,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원인에 대하여는 주체사관의 관점에 따라 정리한 점이다. 곧 "농민전쟁이 실패하게된 주요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군 지도자들이 옳은 투쟁목표를 내세우지 못한데 있다."고 하여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여 실패한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민대중이 탁월한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올바른 역사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 따라 "농민군이 실패하게 된 것은 또한 일본군국주의의 횡포한 무력간섭 때문이었다."고 하여 일본군의 간섭을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확립된 김일성 중심의 주체사상은 역사연구에서 주체사관으로 나타나 역사서술과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사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완성한 것이 <<조선전사>>[36]였다.

---

36) <<조선전사>>는 1975년 12월에 집필 편찬이 이루어져 1979년 제 1권이 출간되었고, 김일성이 70세가 되는 1982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33권 전권이 완간되었다. 그중 갑오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내용은 1980년에 간행된 13권에 실려있다. 다만 <<조선전사>>에서의 용

참고로 <<조선전사>>에서 관련부분을 인용해보자. "농민전쟁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우선 농민전쟁의 기본담당자였던 농민들 자신의 사회계급적인 제한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당시 농민들의 경제생활조건의 고립성과 분산성은 전쟁수행행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농민들은 침략자와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여러 곳에서 일어났고 투쟁에 일어선 농민의 수는 수십만이라는 큰 규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적 지휘 밑에 조직된 전투부대로서 참가한 농민의 수는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고 하여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련하여 계급적 제한성과 통일적 지휘의 부재를 들었다. 이는 북한의 역사교과서 <<조선력사>>와 거의 일치한다. <<조선전사>>는 역사교과서 <<조선력사>>의 서술에 지도서가 되었던 것이다. 역시 1994년판 <<조선력사>>에서도 "갑오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중요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군의 사상적 제한성에 있었다."고 하여 올바른 지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탁월한 영도[37]만이 농민군의 사상적 제한성을 메꿀 수 있다는 다른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역사서술은 결국 김일성의 영도를 받기 전에는 완전한 혁명과 민족운동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사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다음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1894년 농민전쟁은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근대화를 위한 투쟁이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줄기차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직접적으로는 1894년 부르조아개혁을 실시하도록 힘있게 추동하였다." 나라의 독립과 근대화를 이끌었고 갑오개혁을 추동한 원동력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조선봉건사회의 붕괴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상 북한의 역사교과서에 드러난 갑오동학농민혁명은 크게는 인민의 계급투쟁에 바탕하여 주체사관에 따라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사 전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와 다른 역사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곧 북한 사회가 우리와는 다른 이질적 사회임을 뜻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을 지향하는데, 그리고 남

어는 1894년의 간지를 따와 '갑오농민전쟁'으로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공식적 용어는 '1894년 농민전쟁'과 '갑오농민전쟁'임을 알 수 있다.

37) 탁월한 영도에 대한 설명은 1994년판 <<조선력사>>의 반일의병투쟁에 대한 서술을 보면 분명해진다. "반일의병투쟁의 실패는 인민대중이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탁월한 수준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 하며 정확한 투쟁방침을 가지고 단결된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기였다."

북통일 이후 통일된 역사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북한사회를 진단하고 이해하는 관점을 열어주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과정과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7. 맺는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명예회복과 정당한 예우

점차 일국의 역사는 그 나라만의 역사가 아닌 이웃 나라와 공유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사교과서는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서술이 요청되고 있으며, 우리의 국정교과서체제 또한 이 점을 비켜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국정교과서는 학문 외적인 요인으로 역사용어가 선택되는 등 역사서술이 왜곡되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검토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마찬가지로 발견되었는데, 한국사회의 정상적인 발전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지금까지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동학란', '동학혁명', '동학혁명운동', '동학농민혁명운동', '동학운동', '동학농민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이것은 각기 다른 역사적 관점과 정치·사회적 배경 때문에 빚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역사용어의 변천을 자세히 살피면 그에 따른 역사서술의 문제점과 그 시기의 특징을 살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시기별로 살펴볼 때 1960년대까지는 '동학란'으로 표기되었고, 1970년대는 어떠한 수식어가 붙든 '동학혁명'으로 표기되었으며, 1980년대에서 지금까지는 역시 '농민'이 들어가거나 빠진 '동학운동'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용어의 변천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동학란'의 시대로서 왕조질서에 반기를 들거나 기존의 체제질서를 어지럽힌 비적의 소요 쯤으로 인식되어, 갑오동학농민혁명의 근대 사회로의 원동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왕조시대의 역사인식이 그대로 답습된 역사용어에서 그 시대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아래로부터의 사회변혁은 금기사항이었고, 오직 지배층 위주의 역사인식이 강요된 반쪽의 '역사 시대'였다.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마저도 '동학란'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러한 '동학란'의 시대에는 당연히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희생

자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었을 터이고, 그 유가족들 또한 비도나 반역자의 후손으로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아야 했다. 농민군의 후손으로서는 대단히 음울한 시대였다. 이 시기는 역사학계로서도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던 만큼 왕조적 유습이나 식민지적 잔재가 얼마나 강하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였는지 짐작케 한다.

두 번째 시기는 '동학혁명'의 시대로서 전 시기의 '반란'에서 하루 아침에 '혁명'으로 용어가 격상된 시기였다. '동학란'이라 표기했던 첫 번째 시기가 그 당시 보수적 학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반란'적 시각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래도 학문 내적 요인으로 역사용어가 정해졌다고 한다면, '동학혁명'의 시대는 그때까지 학문적 성과가 '혁명'으로 인정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동학혁명'으로 표기되었다. 학문 내적 요인보다는 학문 외적 요인이 역사용어를 결정하였으므로 1979년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농민'이라는 용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이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주체세력으로서 '농민'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동학교문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동학의 사상과 활동을 과도하게 평가하려는 의도와 직결된 것이었다. 역시 유신체제가 출범된 이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한 '국적있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결과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에서 용어만 '혁명' 혹은 '혁명운동'으로 바꾸고 외형적으로 기념조형물을 조성하였을 뿐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실천적 방안이나 혁명 정신을 계승하려는 어떠한 실질적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서훈추진과 같은 조치는 계속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을 '민족의식의 고양'이나 '국적있는 교육' 등의 미사여구를 통해 보상하려 했던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시대였다.

세 번째 시기는 '동학운동'의 시대로서 '반란'도 아니고 '혁명'도 아닌,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양끝을 잘라내고 어정쩡하게 중간적 용어를 취한 시기였다. 특히 1982년판 국사교과서에서 '동학운동'이라고 표기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겉보기에 '운동'이라는 용어가 '3·1 운동'에도 쓰이고 '민주화 운동'에도 쓰이니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무색무취'해 보이는 용어이지만 실은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무력화시키고 그에 대한 열정을 박제화시키는 지극히 강력한 표백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고 출범한 5공의 정치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일상생활의 모든 인간활동에 쓰일 수 있는 '운동'이라는 용어가 역사의 엄밀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 대답은 '절대 아니오'다. 3·1 운동과 민주화 운동도 그 역사적 의미를 희석하는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차제에 3·1 운동, 민주화 운동 등의 역사용어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동학운동'의 시대 전기(前期)로서 1980년대는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불붙던 시기였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무력화시키고 희석시키려는 의도에 반발하여 연구가 더욱 진행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1970년대부터 꾸준히 한국사회의 내재적 발전과정을 탐구해온 학적 성과물들이 1980년대의 상황과 맞물려 촉발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축적된 학적성과는 1990년대에 이르자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정창렬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갑오농민전쟁연구-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연세대, 1991. 6)를 선두로 본격적인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한 것이다.[38] 따라서 '동학운동'의 시대 후기(後期)로서 1990년대는 1980년대의 연구활동이 개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주조는 농민의 각성과 항쟁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근대 사회로 향한 이들의 지향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연구성과에 따라 '동학운동'에서 '농민'의 힘이 반영된 '동학농민운동'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여전히 국정체제라는 제한 때문에 '운동'이라는 용어는 교체되거나 탈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동학'과 '운동'이라는 용어는 그 전 시기에 비해 역사적 의미가 훨씬 약화되었고, '농민'이라는 용어가 강조되었다. 이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성과가 풍부하고 그에 대한 위상을 정당하게 조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유족회가 결성되는 등 그 유족 및 후손들이 떳떳하게 사회의 양지로 나올 수 있었고, 본격적으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서훈추진운동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거

---

38) 그밖에도 주요 논문과 저서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이화,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7~10, 역사비평사, 1989~1990; 신영우, "갑오농민전쟁과 영남보수세력의 대응-예천·상주·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12; 고석규, "19세기 향촌지배세력의 변동과 농민항쟁의 양상",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8; 정진상,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농민군의 역사적 지향과 전쟁의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2; 우 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3. 1;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 일조각, 1993. 10;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연구", 고려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7;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4; 이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전라도 태인현의 재지사족-도강 김씨를 중심으로", 전북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8; 김양식,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6. 9.

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국정체제의 한계와 낡은 법해석 때문에 명예회복과 서훈추진 등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비록 국정교과서라고 하더라도 갑오동학농민혁명이 근대 사회를 연 민족운동으로서, 또 항일의병전쟁의 모태로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서훈추진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고 할 것이다.

수 십년 동안 국사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일반적 역사인식을 대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잣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적어도 1970년대부터 '동학란'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이거나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하고 있고, 그 성격도 반봉건·반침략적 민족운동으로서 규정하고 반침략적 성격은 의병전쟁을 이끌어내어 항일무장투쟁을 활성화시켰다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는 만큼 갑오동학농민혁명이 항일독립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962년 공적심사위원회의 낡은 결정은 이제 철회되어 마땅하다. 그리고 1990년 이후 나온 본격적인 연구논문과 주요 저서들이 갑오동학농민혁명의 그러한 역사적 성격을 더욱 확인해주고 있는 마당에 학계의 의견 통일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학계의 연구성과에 캄캄한 발언이다. 이제 국가보훈처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희생자와 참가자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적에 따른 서훈과 예우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유족들은 선조들이 비적이나 난민으로 몰린 불명예만이라도 씻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현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난점이 있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자랑스런 역사에 대한 제도적 현창(顯彰)과 지원(支援)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그러한 현창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국난극복의 역사를 아름답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국난극복의 현장에 기꺼이 뛰어들 것인가.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희생자와 참가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당한 예우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역사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족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며,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젼을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주요 참고문헌 >>

1. 교과서류

유홍렬, 1953, 『우리나라 역사』(1949년판), 조문사
이병도, 1960, 『국사』(1956년판), 일조각
이병도, 1965, 『중등국사』, 을유문화사
이홍직, 1970, 『국사』, 동아출판사
문교부, 1974, 『국사』(고등학교), 문교부
문교부, 1975, 『국사』(중학교), 문교부
문교부, 1979, 『국사』(고등학교), 문교부
문교부, 1979, 『국사』(중학교), 문교부
문교부, 1982, 『국사』하(고등학교), 문교부
문교부, 1982, 『국사』하(중학교), 문교부
문교부, 1991, 『국사』하(고등학교, 1990년판), 문교부
문교부, 1991, 『국사』하(중학교, 1990년판), 문교부
문교부, 1998, 『국사』하(고등학교, 1996년판), 문교부
문교부, 2001, 『국사』하(중학교, 1997년판), 문교부

문교부, 1988, 『국사 교사용지도서』(고등학교, 1982년판), 문교부
문교부, 1991, 『국사 교사용지도서』(고등학교, 1990년판), 문교부
문교부, 1999, 『국사 교사용지도서』(고등학교, 1996년판), 문교부

북한, 1984, 『조선력사』(고등중학교2), 교육도서출판사
북한, 1990, 『조선력사』(고등중학교3), 교육도서출판사
북한, 1982, 『조선력사』(고등중학교4), 교육도서출판사

2. 연구저서, 단행본

김상기, 1947, 『동학과 동학란』, 대성출판사
최익한, 1955, 『실학파와 정다산』(1989년 청년사에서 재간행)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1958,
『조선통사 하』(1989년 도서출판 오월에서 재간행)
진단학회, 1963, 『한국사 현대편』, 을유문화사
姜在彦, 1970, 『조선근대사연구』, 日本評論社
한우근, 1971, 『동학란기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김의환, 1974, 『전봉준전기』, 박영문고

金榮作, 1975,『한말내쇼날리즘의 연구』, 동경대 출판회 사회과학원 력사
연구소, 1980, 『조선전사 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사연구회, 1981,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山辺健太郎, 1982, 『한국근대사』, 까치
최현식, 1983,『갑오동학혁명사』, 향토문화사
한우근, 1983,『동학과 농민봉기』, 일조각
송건호·강만길, 1983, 『한국민족주의론 Ⅱ』, 창작과 비평사
조선사연구회 편, 1983, 『새로운 한국사입문』, 돌베개
신일철 외, 1984,『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강만길, 1984,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강만길, 1984,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이종현 편, 1984, 『근대조선역사』(1988년 일송정에서 재간행)
송건호·강만길, 1985, 『한국민족주의론 Ⅲ』, 창작과 비평사
한국민중사연구, 1986, 『한국민중사 Ⅰ,Ⅱ』, 풀빛
김광수 편, 1986, 『조선근대사』,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한국사연구회, 1987, 『제2판 한구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송건호·강만길, 1988, 『한국민족주의론 Ⅰ』, 창작과 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1990,『조선정치사 1800~1863』상·하, 청년사
한국역사연구회, 1991~1997,『1894년 농민전쟁연구』1~5, 역사비평사
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1,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1)』, 여강출판사
이찬희 외, 1991, 『북한 '조선력사' 교과서 내용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역사연구회, 1992,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우윤, 1993,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창작과 비평사
동학농민혁명기업사업회 편, 1993,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한울
신용하, 1993,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일조각
조동걸, 1993,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이이화, 1994, 『조선후기의 정치사상과 사회변동』, 한길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4,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쟁점』, 집문당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업사업단체협의회,
1995,『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백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5,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샛길
김양식, 1996,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이찬희 외, 1997,『남북한 중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조동걸, 1998, 『한국근현대사의 이해와 논리』, 지식산업사
趙景達, 1998, 『異端の 民衆反亂』, 岩波書店

전라북도, 1999,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기본계획서』
윤종영, 1999, 『국사교과서파동』, 혜안
교육부, 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 교육부
교육부, 2000, 『제 7차 교육과정의 개요』, 교육부
조동걸, 2001, 『한국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 푸른역사

3. 논문

菊池謙讓, 1910, 「일청전쟁과 대원군」, 『한국최근외교사-대원군전』, 日韓書房
朴殷植, 1915, 「갑오동학지란」, 『韓國痛史』, 대동편역국
황의돈, 1922, 「민중적 규호의 제일성」, 『개벽』 1922년 4월~5월 호
信夫淸三郎, 1935, 「동학당의 난」, 『陸奧외교-일청전쟁의 외교사적 연구』, 叢文閣
菊池謙讓·田內蘇山, 1936, 「동학당의 전란-옥중의 전봉준」, 『近代朝鮮裏面史』, 조선연구회
장봉선, 1936, 「전봉준실기」, 『정읍군지』, 이로재
菊池謙讓, 1939, 「동학당의 난」, 『근대조선사』 하권, 계명사
田保橋潔, 1940, 「동학변란」,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조선총독부중추원
石井壽夫, 1941, 「교조 최제우에 있어서 동학사상의 역사적 전개」, 『歷史學硏究』 11-1
全州府 편, 1943, 「동학의 변란과 전주」, 『全州府史』, 전주부
전석담, 1949, 「이조봉건사회의 총결로서의 동학농민란」, 『조선경제사』, 박문출판국
朴慶植, 1953, 「개국과 갑오농민전쟁」, 『역사학연구』 특집호, 『조선사의 제문제』
김용섭, 1958, 「동학란연구론」, 『역사교육』 3
김용섭, 1958, 「전봉준공초의 분석」, 『사학연구』 2
오길보, 1959, 「갑오농민전쟁과 동학」, 『력사과학』 3
朴宗根, 1962, 「동학과 1894년(甲午)의 농민전쟁에 대하여」, 『역사학연구』 269
박종근, 1962, 「갑오농민전쟁에 있어서 전주화약과 폐정개혁안」, 『歷史評論』 140
이상백, 1962, 「동학당과 대원군」, 『역사학보』 17·18
김용덕, 1963, 「북학사상과 동학」, 『사학연구』 16
김용덕, 1964, 「동학사상연구」, 『중앙대논문집』 9
한우근, 1964, 「동학군의 폐정개혁안검토」, 『역사학보』 23
한우근, 1964,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특히 일본의 경제적 침투와

관련하여」, 『아세아연구』 15·16
오길보, 1964, 「1894년~1895년(갑오)농민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력사과학』 3
한우근, 1967, 「동학군에 대한 일인의 방조설검토」, 『동방학지』 8
梶村秀樹, 1968, 「李朝末期 朝鮮의 纖維製品의 生産 および 流通狀況」, 『東洋文化硏究所紀要』 46
한우근, 1969, 「동학사상의 본질」, 『동방학지』 10
한우근, 1970, 「동학의 리더쉽」, 『백산학보』 8
한우근, 1973, 「동학농민군의 제 1차 봉기」,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한우근, 1973, 「동학농민군의 제 2차 봉기」, 『한국사』 17
김용덕, 1974, 「격문을 통해 본 전봉준의 혁명사상」, 『나라사랑』 15, 외솔회
김의환, 1974, 「갑오동학농민항쟁과 남·북접 문제」, 『나라사랑』 15
김용덕, 1974, 「동학군의 조직에 대하여」, 『한국사상』 12, 한국사상연구회
김의환, 1974, 「전주화약과 집강소」, 『한국사상』 12
横川正夫, 1976, 「전봉준에 대한 일고찰」, 『조선사연구회논문집』 13, 龍溪書舍
馬淵貞利, 1979,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위치」, 『조선역사론집』 하권, 龍溪書舍
瀨古邦子, 1979, 「갑오농민전쟁에 있어서 집강소에 대하여」, 『조선사연구회논문집』 16
강재언, 1980, 「봉건체제 해체기의 갑오농민전쟁」,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0, 「1894년(갑오)농민전쟁」, 『조선전사』 13
정창렬, 1981, 「동학과 농민전쟁」,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정창렬, 1981, 「동학과 동학란」, 『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우 윤, 1981, 「동학민중운동의 역사적 방향성과 동태적 요인분석」,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趙景達, 1983, 「갑오농민전쟁지도자=전봉준의 연구」, 『朝鮮史叢』 7
홍성찬, 1983, 「1894년 집강소기 設包下의 향촌사정」, 『동방학지』 39
조경달, 1985,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 『한국근대정치사연구』, 사계절
박찬승, 1985, 「동학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지향」, 『한국민족주의론』 3, 창비사
정창렬, 1985, 「고부민란의 연구」上·下, 『한국사연구』 48, 49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의 제 1차 농민전쟁」, 『학국학보』 40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시기의 농민집강소 설치」, 『한국학보』 41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시기의 농민집강소 활동」, 『한국문화』 6,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의 주체세력과 사회신분」,
『한국사연구』 50·51
김운태, 1986,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정창렬, 1987,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한국사연구입문』 2판,
지식산업사
안병욱, 1988,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연구현황」,
『한국근현대사연구입문』,역사비평사
강창일, 1988, 「천우협과 '조선문제'」, 『사학잡지』 97편 8호
우 윤, 1988,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 『역사비평』 1988년 봄호,
역사비평사
남지대, 1988, 「고교 국사교과서의 근현대편의 서술과 문제점」,
『역사비평』 1988여름, 역사비평사
홍순권, 1989, 「을사조약 이후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발전과
의병장들의 성격」, 한국학보』 57집, 일지사
이이화, 1989~1990,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 7~10
정창렬, 1991, 「갑오농민전쟁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신영우, 1991, 「갑오농민전쟁과 영남보수세력의 대응」,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조 민, 1991, 「한국근대변혁운동의 정치사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정진상, 1991,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고석규, 1991, 「19세기 향촌지배세력의 변동과 농민항쟁의 양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한종, 1992, 「국사교과서 연구의 성과와 과제」,『경상사학』7,8
김홍수, 1994,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교과서의 편찬」,
『춘천교대 학생생활연구』19
정태헌, 1996,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내용분석,
『고려대 사총』45
배항섭, 1996, 「동학농민전쟁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이진영, 1996, 「동학농민전쟁과 전라도 태인현의 재지사족-
도강 김씨를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전재호, 1997,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이재철, 1998, 「조선후기 정치사의 연구동향과 '고교'국사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67
차미희, 1998, 「현행 남·북한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비교」,
『고려대사총』48